

## 초등학교 1학년 '인성교육 집중학년' 지정

서울시교육청, 내년부터 운영  
사회정서 역량 조기형성 지원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1학년을 '인성교육 집중학년'으로 지정해, 입학 초기 인성 함양을 체계적으로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이런 내용을 담아 '공동체형 인성'을 핵심 가치로 한 '2026 서울인성교육 시행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10월 서울지역 교원, 학부모, 학생 68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집단에서 인성교육 강화 요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초등학교 시기의 인성교육과 가정에서의 역할 강화 필요성이 두드러졌다"며 "디지털 과의존과 유해 콘텐츠 노출 등으로 인한 학생 관계·정서 문제 심화에 대한 우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반영해 초등 저학년 단계부터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2026년부터는 '초등 열두달 만·나·다'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1학년을 '인성교육 집중학년'으로 지정해 입학 초기의 기초 인성을 집중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 적응 과정에서 필요한 사회정서 역량을 조기에 형성하도록 돋는다는 구상이다.

내년부터 모든 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사회정서 교육을 전면 시행한다.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학생 관계 문제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가정 연계 인성교육도 확대한다. 설문에서 '가정'을 인성 발달의 핵심 요소로 꼽은 결과를 반영해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자치구와 대학, 공공기관과 협력할 예정이다. 도서관, 미술관 등 지역 문화시설과 연계한 지역 연계 체험형 인성교육 과정도 개설한다. /이현진 기자

# "2040년도에 수능 전면 폐지하고 자사고·외고, 일반고 전환 제안"

## 서울시교육청 '미래형 대입제도' 융합형 미래인재 성장지원 체제

### 2028년도 상대평가 즉각 폐지 2033년부터 5단계 절대평가 대입 단일전형으로 준비부담 ↓

서울시교육청이 2033학년도부터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수시·정시를 통합한 학생부 중심 전형을 도입한 뒤, 2040학년도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대입 체제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고교 학점제 도입과 미래 역량 중심 교육 기조에 맞춰 대입을 '학생 성장 이력 중심'으로 짚어야 한다는 취지다. 자사고·외고·국제고는 대부분 일반고로 전환해 고교 체제를 단순화하자고 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래형 대입 제도' 제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내신 평가 체제 개편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대입 전형 개선 ▲고교 교육 개혁 방안 등을 핵심으로 한다.

정근식 교육감은 "미래형 대입제도는 우수 학생 '선발'이 아닌 학생 한명 한명을 융합형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역량 중심 평가 체제로의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2030년 고1부터 절대평가 준비

우선, 2028학년도 대입안에 포함된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상대평가 병기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2033학년도부터는 모든 교과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체계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절대평가를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2030학년도 고1부터는 준비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서·논술형 평가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창의력 문제 해결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과·지필평가에서 서·논술형 비중을 ▲2027학년도 30% ▲

## 미래형 대입제도 제안 내용

	2028학년도 대입	2033학년도 대입	2040학년도 대입
적용	18세 2027년 45만명 적용 2025년 기준 고1 학생	18세 2032년 43만명 적용 2025년 기준 초5 학생	18세 2039년 27만명 적용 2025년 기준 5세
내신 평가	▪ 5등급 상대평가· 절대평가 병기 ▪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	▪ 내신 절대평가 전면 전환 (2030년 고1~적용) ▪ 서·논술형 평가 확대 ▪ 평가 공정성 및 신뢰도 확보 시스템 구축	▪ 내신 절대평가 정착 ▪ 서·논술형 평가 안착
수능	▪ 통합형 수능 과목 체제 ▪ 5지 선다형 문항 중심 수능 ▪ 상대평가 및 절대평가 병행	▪ 서·논술형 평가 도입·확대 절대평가 전환 ※ 수능의 대입 영향 축소	▪ 고교 교육과정 중심 대입체제 정착 ※ 수능 폐지
전형 구조	▪ 수시·정시 분리 ▪ 정시 수능 위주 선발 비율 (정시 30~40%) 폐지	▪ 수시·정시 통합 (2학기 통합 내신평가 종료 후 11~12월 대입전형 실시) ▪ 3학년 2학기 성적 반영	▪ 학생 성장 이력 중심 ▪ 대입지원 체계 정착
대학별 평가	▪ (서울 주요대학) 고교 유형별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지역균형 전형 선발 확대	▪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전면 개편 ▪ (비수도권) 지역 기반 선발 전형 도입	▪ 학교 교육과정 성취 중심 평가 ▪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 보장 ※ 문제은행식 평가와 융합형 면접, 서·논술형 평가 자율 활용

자료/서울시교육청

그래픽/정민주 기자

2028학년도 40% ▲2029학년도 50%로 단계적으로 늘려 2030학년도 이후 과반을 넘기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AI 자동채점 모델 개발, 전문 채점관 양성, 교원 연수 등의 기반 구축도 함께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교육감은 "대학에는 고교 교육과정에 기반한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을 보장하되 필요한 경우 문제은행식 평가와 융합형 면접이나 서·논술형 평가의 활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 수시·정시 통합·대학 자율 확대

대입 전형 단일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3학년도부터 수시·정시를 단일 전형으로 통합해 이중 준비 부담을 줄이고, 고교 교육과정과 대입의 정합성을 높이자는 제안이다. 대입 일정은 고3학기 내신평가 종료 후인 11~12월에 치르는 형태가 제시됐다.

대입 기본 구조는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재편하고, 수능·면접·실기 등은 모집단위 특성에 따른 보조 요소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조합할 것을 제안했다. 사회통합전형 확대, 지역 기반 선발 전형 도입 등 교육격차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수도권 대학에 적용돼 온정시 비율(30~40%) 권고는 2028학년도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오승걸 평가원장, 수능 난도 논란에 사퇴

영어 1등급 비율 3.11% '최저치'  
"입시에 혼란 초래… 책임 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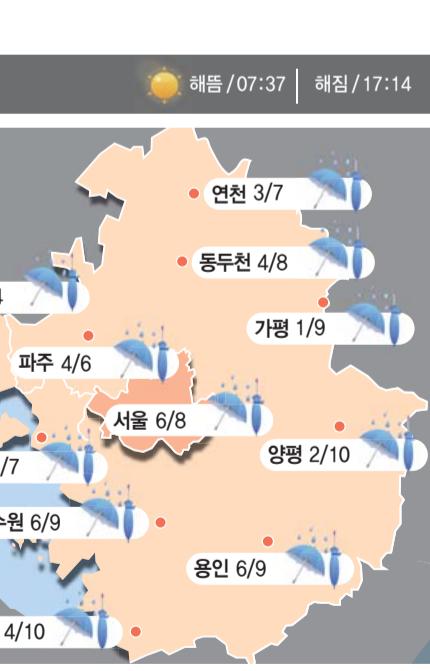
도입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존 최저였던 2024학년도 4.71%보다 낮고, 상대 평가 기준 4%보다도 밑도는 수준이다. 사실상 역대 가장 어려운 영어 영역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험생·학부모 사이에서는 "유감 한마디로 책임을 회피하느냐", "영어 한과목 때문에 재수를 고민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등 성토가 이어졌고, 평가원 홈페이지에도 비판 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도 진상 조사에 나섰다. 교육부는 최근 "이번 사안을 계기로 수능 출제 및 검토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즉시 시행하겠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수능에서는 특히 영어 난도가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절대평가 체제에서 영어 1등급 비율은 3.11%(1만 5154명)로 나타나 2018학년도 절대평가

/이현진 기자



## '상습 침수' 대림1구역 재개발… 1026세대 공급

### 서울시, '신통기획 2.0' 적용 주거환경 개선, 재난 예방 실현

지난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됐던 '대림1구역'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으로 정비 속도가 빨라진다. 대림1구역은 대림동 855-1번지 일대 4만2430㎡ 규모로 재개발 후 보지 선정 당시 노후도가 80%에 이를 정도로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저층 주거지역이었다.

서울시는 '대림1구역'에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 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재

난 예방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맞춤형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2035년까지 최고 35층, 1026세대 공급 계획이다.

'대림1구역'은 시가 지난 7월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2.0 적용지로 평균 18년 6개월이 걸리던 정비사업을 12년 수준으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작년 9월 발표한 '2030 기본계획' 등도 반영해 ▲허용용적률(최대 20%) 완화 ▲사업성 보정계수(1.53%) 적용 등 사업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우선 대상지 용도지역을 2종일반에서

3종일반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1.53%)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최대 20%)를 확대 적용해 용적률을 250%에서 285%로 대폭 완화했다.

아울러 원주민들이 분담금 부담 없이 새 아파트에 안정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실거주 소형 평형 중심으로 가구 유형(평형)도 배분한다.

해당 지역이 상습 침수 취약지인 점을 감안해 단지 내 공원 지하에 1만5000톤 규모의 대형 저류조도 조성한다. 집중호우 시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이다.

/이현진 기자

## 메트로 한줄뉴스



▲美 트럼프 "연준 의장, 여러 후보 검토…내가 원하는 인물 있어"  
▲中 항모, 日 혼슈 근접 항해…日, 中무력시위 일상화 우려

▲인도, '운항 취소 대란' 자국 최대항공사에 10% 운항 감축 명령  
▲한·캄 경찰, 범죄단지 급습 51명 검거…고문당 하던 20대 구출

▲영국, 中기술기업 2곳 제재…중국 "불법적·일방적 제재" 반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7층 규모 건물 화재… 임신부 포함 22명 사망